

#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sup>1)</sup>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choik@kipf.re.kr)

## I. 들어가며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되었다. 주인공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조 바이든(J. Biden). 선거는 치열했다. 당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었지만,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숨어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표마감 직후 사흘이 지나도록 당선인이 확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우편투표 결과가 합산되기 시작하자 전세는 바이든 쪽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선 나흘만인 11월 7일(현지시간 기준) 바이든이 당선에 필요한 최소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한 가운데 (이번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되었다.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28년 만에 부통령 출신 대통령이 되었지만, 바이든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폭넓고 복잡해 보인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드러난, 극심하게 좌우로 갈라진 미국의 정치적 지형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후보였으되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중도주의자 내지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 그가 여야로 대변되는 진보·보수 양쪽의 정치적 요구를 모두 만족스럽게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의 복원 과제 역시 그 해결책 모색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구조 속에서 코로나19발(發) 장기 실업 및 기업 파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새롭게 들어설 행정부의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미국 내 정치·경제적 현안들 외에도, 중국, 북한 등과의 외교·안보 문제,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범지구적 환경 문제 등 바이든을 기다리고 있는 국내외 문제들은 산적해 있어

1) 본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및 편집위원분들, 원내 토론을 통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고에서 활용된 자료의 취합·정리를 위해 애써주신 김현숙 선임연구원에 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기 4년이 무척이나 짧아 보이는 형국이다.

막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바이든이 들고 나온 정책들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선거전 당시 그가 외친 구호는 “Build Back Better”(BBB)로, 번역하자면 “발전적 재건”이다. 마치 자연재해로 폐허가 된 듯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미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그가 밝히고 있는 BBB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부(富)가 아닌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자는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바이든 캠프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록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어려워지면서 바이든노믹스(Bidenomics)가 초반부터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반 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고 있는 정치·경제적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매우 요긴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 정책에 대하여 차분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Ⅱ장에서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현 좌표를 짚어본다. 뒤이어 제Ⅲ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을,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예상 세입·세출 규모와 함께, 소개·정리한다. 한편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성장·분배·재정적 측면에서의 영향은,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제Ⅳ장에서 집중 조명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바이든 조세·재정 정책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및 시사점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짓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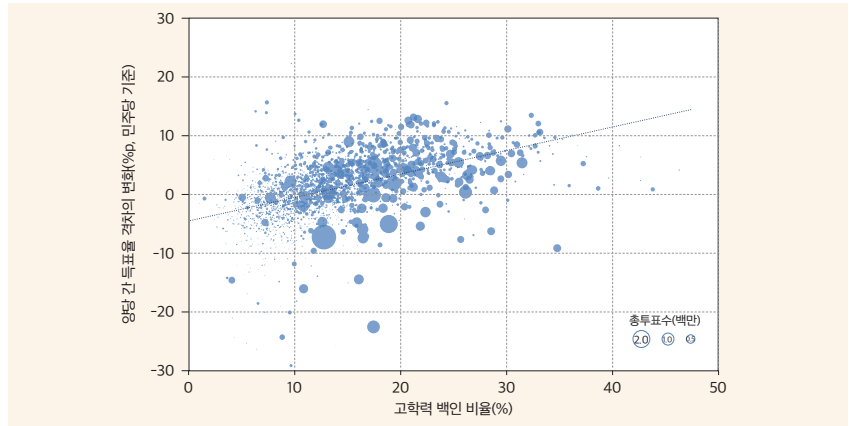
## II.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 1. 정치 상황: 대선결과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3일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지형도를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지지정당 양극화의 심화”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카운티(county)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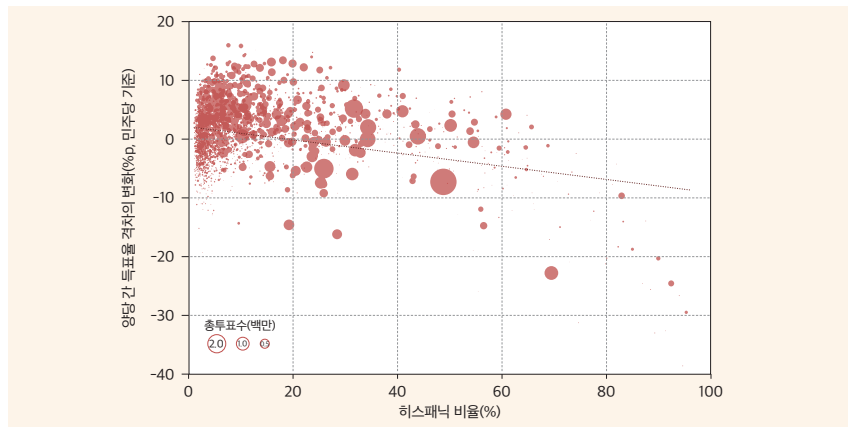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지형도는 “지지정당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 카운티 내 고학력 백인 비율과 양당 간 득표율 격차의 변화



주: 각 원은 카운티에 대응되며 그 크기는 2020년 대선에서의 총투표수에 비례함  
출처: Decision Desk HQ; The New York Times; MIT Election Lab; Census Bureau

[그림 2] 카운티 내 히스패닉 비율과 양당 간 득표율 격차의 변화



주: 각 원은 카운티에 대응되며 그 크기는 2020년 대선에서의 총투표수에 비례함  
출처: Decision Desk HQ; The New York Times; MIT Election Lab; Census Bureau

구성에 따른 민주·공화당 간 득표율 격차의 변화를 최근 두 차례의 대선을 통해 살펴보면, 2020년 대선에서 고학력 백인 비율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민주당 지지와, 히스패닉 비율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공화당 지지가, 2016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이는 인종과 교육수준에 따른 지지 정당 공고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대선 직후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붉은 미국은 더욱 붉게, 파란 미국은 더욱 파랗게 되

고 있다(Red America is growing more red and blue America more blue)”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의 표출로 진단하는 한편, 문제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해소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적 분열 극복이라는 과제의 해결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에게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다.

## 2. 경제 상황: 코로나19 여파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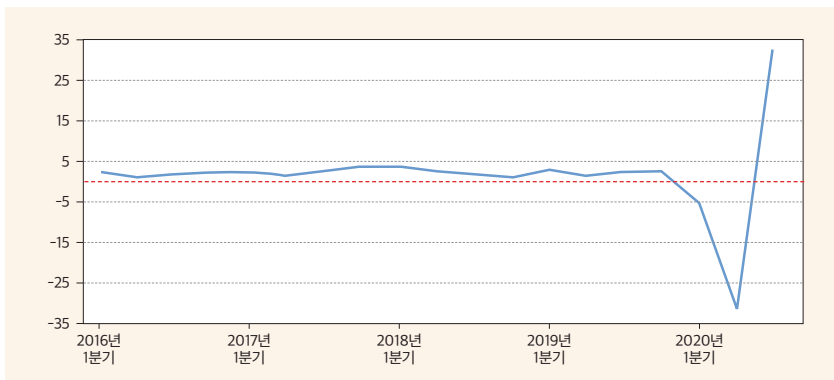
미국의 2020년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의 급격한 침체, 이후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회복,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여파와 불확실성의 공존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처음 보고된 것은 올해 1월 22일(현지시간 기준)이다. 이후 2월 말까지 별다른 확산세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3월 초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3월 13일 국가적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미국 전역에 봉쇄 조치가 내려지기에 이른다. 공공기관, 학교, 상점 등이 봉쇄 조치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경제적 영향은 상당했는데, 2020년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카운티별  
인구 구성에 따른  
민주·공화당 간 득표율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종과 교육수준에 따른  
지지정당 공고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미국의 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2016년 1분기~2020년 3분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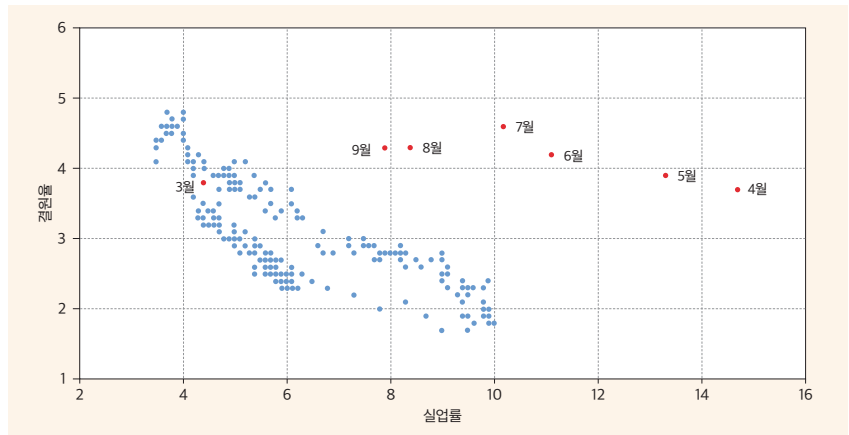
주: 계절조정 연환산치임  
출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의 2020년  
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의 급격한 침체,  
이후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회복,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여파와 불확실성의  
공존으로 요약된다.

너스로 돌아서게 된다([그림 3] 참조). 봉쇄령이 5월 중순까지 지속됨에 따라 미국의 경제지표는 더욱 악화되는데, 2020년 4월 미국의 실업률은 14.7%까지 치솟게 되고 영업 중인 사업자의 수는 동년 1월 대비 20% 이상 급감하게 된다(Fairlie, 2020). 이에 따라 미국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31.4%로 집계,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1947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그림 4] 미국의 베버리지(Beveridge) 곡선(2001년 1월~2020년 9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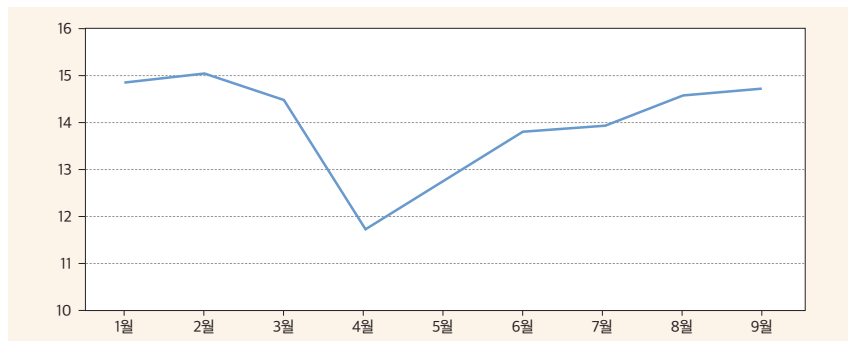


주: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실업률-결원율 조합은 붉은색 점들로 표현되어 있음. 2020년 9월 결원율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치임

출처: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 5] 미국 내 영업 중인 사업자의 수(2020년 1~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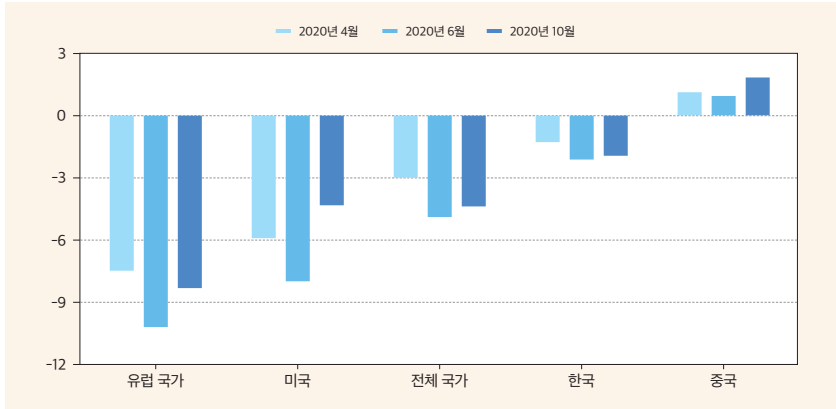
(단위: 백만명)



출처: 상반기 추정치는 Fairlie(2020)의 <표 1>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 3분기 추정치는 Fairlie의 개인 홈페이지(<https://people.ucsc.edu/~rfairlie/current>, 최종 검색일자: 2020. 12. 6.)에 추가로 게시된 자료를 활용

[그림 6] 미국과 주요국의 2020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주: 옅은 푸른색은 2020년 4월, 중간 푸른색은 6월, 짙은 푸른색은 10월 전망치에 각각 해당됨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하지만 봉쇄 해제 이후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우선 실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9월에는 7.9%를 기록,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이 감지되었다([그림 4]<sup>2)</sup> 참조). 영업 중인 사업자의 수도 3분기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9월에는 동년 1월의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5] 참조). 이러한 회복세에 힘입어 미국의 3분기 실질 GDP 역시 33.1% 증가하였는데, 최근 IMF는 이와 같은 경제지표 개선을 반영하여 지난 4월 -5.9%로 전망하였던 미국의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을 -4.3%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이 같은 기간 -7.5%에서 -8.3%로 하향 조정된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그림 6] 참조), 미국의 경기회복이 기존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기존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와 전망치들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 경제를 낙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경제적 회복력에 이질성이 목격됨에 따라 유가가 필요하다. 가령 연소득이 6만달러를 초과하는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11월 현재 연초의 고용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반면, 연소득 2.7만달러 미만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그 고용수준이 여전히 동년 1월 대비 2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etty et al., 2020; [그림 7] 참조).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경제적 취약계층에만 장기간 집중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경제지표 해석 시 간과되지 말아야

고임금근로자에 비해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수준 회복이 더딘 점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경제적 취약계층에만 장기간 집중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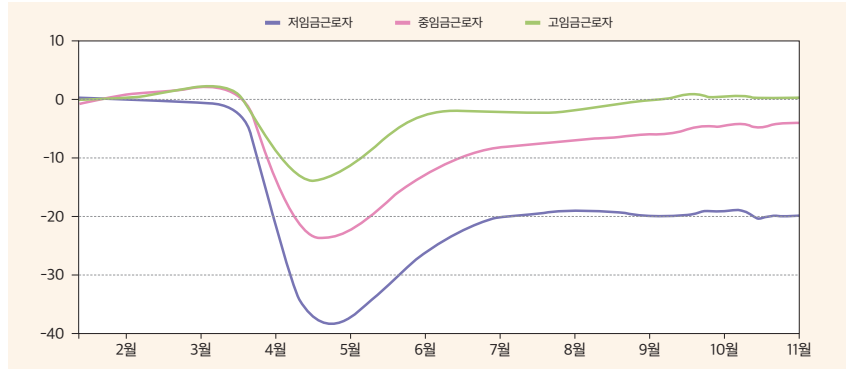
2) [그림 4]에 제시된 베버리지(Beveridge) 곡선은 실업률과 결원률(vacancy rate)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그림 내 푸른색 점들에 해당)를 지닌다. 그러나 2020년 4월 실업률-결원률 조합은 기존 곡선으로부터 크게 이탈되어 있으며, 이후 집계된 실업률-결원률 조합들은 기존 곡선으로의 복귀 움직임(그림 내 붉은색 점들에 해당)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이면 연방정부의 부채가 미국 GDP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재정 확대 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할 부분이다. 한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하여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향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미 의회예산처)는 불과 1년 전 올해 연방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그 예측치를 98%로 수정하였다(그림 8 참조). 이에 따라 내년이면 연방정부의 부채가 미국 GDP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향후 재정 확대 여력을

[그림 7] 임금수준별 2020년 1월 대비 고용수준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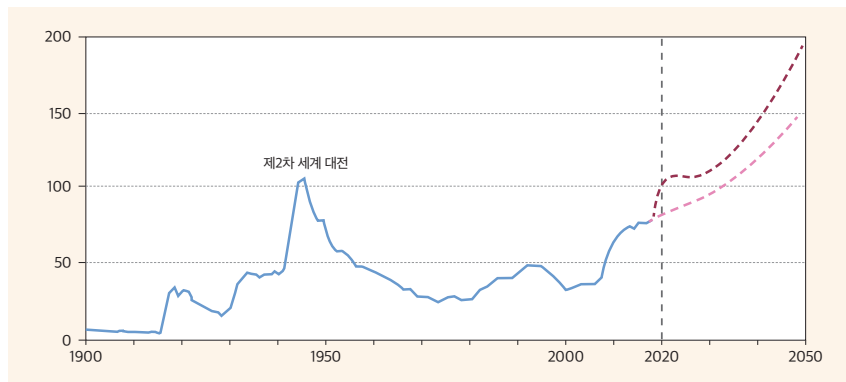


주: 임금수준이 연 2.7만달러 미만인 경우 저임금근로자, 2.7만달러 이상 6만달러 이하인 경우 중임금근로자, 6만달러 초과인 경우 고임금근로자로 분류됨. 계절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출처: Opportunity Insights

[그림 8]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 추이 및 전망(1900~2050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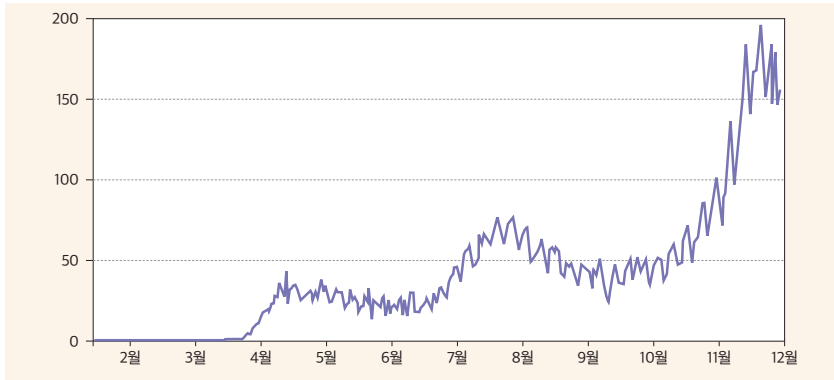


주: 엷은 붉은색은 2019년 전망치, 짙은 붉은색은 2020년 전망치에 해당됨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그림 9]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단위: 천명)



주: 2020년 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일별 신규 확진자 수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록 최근 백신 보급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의 희망이 일고 있지만, 충분한 물량의 백신 확보와 공급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난관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11월 이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데([그림 9] 참조), 이는 미국의 경제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라 하겠다.

### III. 바이든의 공약: 조세·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이 제시한 방안들을 점검해볼 차례이다. 주지의 사실이듯, 바이든은 델라웨어주(州) 상원의원(36년)과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8년)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흔히 중도주의자 혹은 실용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이력과 성향을 반영하듯, 새로운 행정부는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일정 부분 수용하되, 전반적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바이든 캠프에 참여한 인물들 중에는 오바마 행정부 출신 참모진들이 꽤 포함되어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 고문을 맡았던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잔존은 미국의 경제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바이든이 제시한  
조세정책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하였던 조세감면  
정책의 무효화라  
할 수 있다.**

자레드 번스타인(J. Bernstein)이 대표적이다. 공정한 성장을 위한 워싱턴 센터(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의 대표 헤더 부쉐이(H. Boushey)와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경영대학원(Kellogg School of Management at Northwestern University)의 교수 벤 해리스(B. Harris) 등도 바이든 캠프에 가담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도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인사들이다. 이러한 까닭에 바이든 캠프가 선거에서 내세운 경제정책들 역시 전체적으로 중도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조세 및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1. 조세정책**

바이든이 제시한 조세정책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하였던 조세감면 정책의 무효화라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미국 내 투자 증대 등을 목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감세정책인 TCJA(Tax Cuts and Jobs Act,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를 관철시킨 바 있다. 바이든은 이러한 세제개편의 혜택이 사실상 부유층에게만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부자 증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표 1> 미국의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추이(2011~2020년)**

(단위: %)

연도	법인세율	소득세율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2011	35.0	10.0	15.0	25.0	28.0	33.0	35.0	-
2012	35.0	10.0	15.0	25.0	28.0	33.0	35.0	-
2013	35.0	10.0	15.0	25.0	28.0	33.0	35.0	39.6
2014	35.0	10.0	15.0	25.0	28.0	33.0	35.0	39.6
2015	35.0	10.0	15.0	25.0	28.0	33.0	35.0	39.6
2016	35.0	10.0	15.0	25.0	28.0	33.0	35.0	39.6
2017	35.0	10.0	15.0	25.0	28.0	33.0	35.0	39.6
2018	21.0	10.0	12.0	22.0	24.0	32.0	35.0	37.0
2019	21.0	10.0	12.0	22.0	24.0	32.0	35.0	37.0
2020	21.0	10.0	12.0	22.0	24.0	32.0	35.0	37.0

주: 소득구간 기준은 매년 갱신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값들은 아래 출처에 제시된 자료들에서 확인 가능함  
출처: OECD Tax Database; Internal Revenue Service

3) 바이든 캠프의 통상, 환경, 이민 정책 등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강구상 외(2020)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캠프의 조세정책 공약을 살펴보면,<sup>4)</sup> 우선 법인세율 인상이 눈에 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법인세율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기존 35%에서 21%로 인하된 바 있다(<표 1> 참조). 이는 37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과 비교했을 때 2.5%p 낮은 수준(2020년 기준)으로,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7%p 높은 28%로 인상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바이든 캠프는 연매출 1억달러 이상 법인의 회계이익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tax,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의 세율(10.5%) 두 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TCJA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뚜렷하게 목격된다. 우선 2017년 발효된 TCJA에 따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아졌던 소득세 최고세율(37%)이 바이든 집권 시 기존 39.6%로 회복될 전망이다(<표 2> 참조). 또한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의 최대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던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sup>5)</sup>에 대한 세제혜택도 일정 소득기준(40만달러)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sup>6)</sup> 나아가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20%에서 39.6%로 상향 조정됨은 물론, 연소득 40만달러 초과 시 항목별 공제의 한도가 28%로 제한될 전망이다.

법인세, 소득세 등에 이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 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향후 40만달러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도 현행 12.4%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세제를 도입·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하였던 일련의 감세정책들을 철폐하되, 그 대상은 담세력에 비해 실질부담률이 현저히 낮다고 여겨지는 법인 혹은 개인 고소득자로 한정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세제개편안의 골자이다.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만일 이러한 바이든의 세제개편안이 (2021년 취임 직후 즉각적으로 발효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증가시킬 수 있는 세수의 규모는 향후 10년간 3.8조~4.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표 2> 참조). 이는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 시 1.4~1.6%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초 바이든 캠프가 제시한 세수 목표와 유사한 수준이다. 예상되는 세수 증가의 견인차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들을 철폐하되, 그 대상은 담세력에 비해 실질부담률이 낮다고 여겨지는 법인 혹은 개인 고소득자로 한정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세제개편안의 골자이다.**

4) 이하의 바이든 캠프 조세정책 관련 논의는 CRFB(July 30, 2020)의 "Understanding Joe Biden's 2020 Tax Plan"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5)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s), 동업기업(partnerships), S-법인(S-corporations) 등이 해당된다.

6) 소득수준이 4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존 TCJA에 따라 2025년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의 세제개편으로  
증가하게 될 세수의  
규모는 이전 세제개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편에  
속할 것으로 전해진다.

<표 2> 바이든의 조세정책 공약 및 예상 세수입(2021~2030년)

(단위: 십억달러)

분류 및 내용		TPC	PWBM	TF	AEI
법인세	법인세율 인상(21%→28%)	1,300	1,088	1,306	1,297
	법인 회계이익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166	227	318	160
	GILTI 세율 인상(10.5%→21%)	309	323	303	310
소득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	143	153	151	100
	패스루 기업의 공제혜택 단계적 폐지	219	208	197	212
	자본이득세율 인상(20%→39.6%)	448	382	503	379
	항목별 공제의 한도 28%로 제한	376	263	357	312
사회보장세: 40만달러 이상 임금에 12.4% 적용		962	1,035	808	797
기타		120	117	130	185
합계 (GDP 대비 %)		4,043 (1.55)	3,796 (1.46)	4,073 (1.56)	3,752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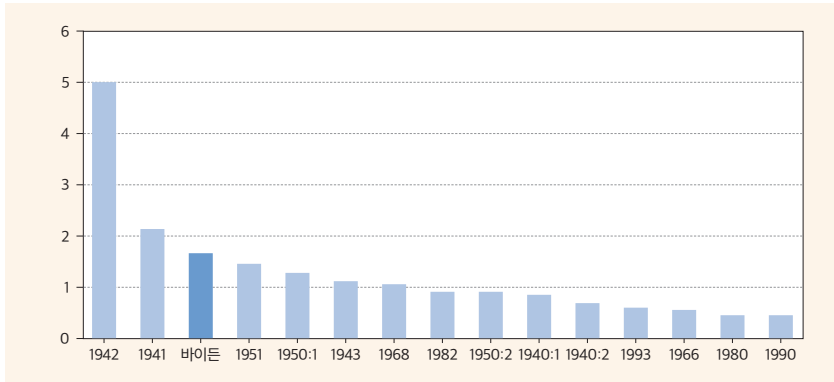
주: TPC는 Tax Policy Center(조세정책센터), PWBM은 Penn Wharton Budget Model(펜와튼예산모델), TF는 Tax Foundation(조세재단), AEI는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미국기업연구소)를 각각 의미함.  
기타에 포함된 세부항목들의 목록은 아래 출처에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함  
출처: CRFB(July 30, 2020)의 "Understanding Joe Biden's 2020 Tax Plan"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세율 증가가 예고된 법인세가 맡을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성 가능한 추가 세수의 규모는 1.1조~1.3조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예상 세수 증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회보장세의 기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전체 세수 증가액의 최소 20%는 고소득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추가 적용에 기반할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내다봤다.

흥미롭게도 바이든의 세제개편으로 증가하게 될 세수의 규모는 이전 세제개편들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편에 속할 것으로 전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당파적 연구기관인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책임 있는 연방예산을 위한 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조성 가능한 세수의 양이 향후 10년간 4.3조달러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며, 이는 GDP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10 참조). 하지만 CRFB는 이와 같은 예상이 바이든 캠프의 공약에 포함된 모든 세제개편안들이 동시에 통과·발효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역사적 수준의 세수 증가를 실제로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림 10] 바이든 조세정책과 이전 조세정책들과의 비교: (예상) 세수입

(단위: GDP 대비 %)



주: 1950:1과 1950:2는 「Revenue Act of 1950」과 「Excess Profits Tax of 1950」에, 1940:1과 1940:2는 「Revenue Act of 1940」과 「Second Revenue Act of 1940」에 각각 해당됨. 1968년 이전의 법안들은 1년간, 1968년과 1977년 사이의 법안들은 2년간, 1977년 이후의 법안들은 4년간, 바이든 조세정책은 10년간 평균 (예상) 세수입을 추정한 수치임

출처: Tempalski(2013)와 CRFB(October 21, 2020)의 「Factchecking Tax Claims in the 2020 Election」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재정정책

이제 바이든의 조세정책에 이어 그 짝패라 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 대하여 논의할 차례이다. 제Ⅱ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BBB 공약의 “재건” 부분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BBB 공약의 “발전적” 부분의 이행 역시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선거운동 당시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예산을 친환경 기술 및 혁신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집중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신기술 중심의 산업 재편 속에서 정부 투자를 통해 미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촉진·지원하여 BBB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미국의 발전적 재건을 위한 바이든 캠프의 재정지출 계획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sup>7)</sup> 무엇보다도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출계획이 눈에 들어온다(<표 3> 참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정지출 관련 공약이 즉각적으로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바이든은 “발전적 재건” 공약의 이행을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7) 이하의 논의는 필자가 CRFB (October 7, 2020)의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을 바탕으로 바이든의 향후 10년간 재정지출 계획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바이든 캠프에서 제시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재정지출 방안들은 제외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바이든 캠프의 재정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기반시설·환경·복지 분야에 향후 10년간 4.45조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3> 바이든의 재정정책 공약 및 예상 지출규모(2021~2030년)

(단위: 십억달러)

분류 및 내용	저위	중위	고위
보육 및 교육	-2,400	-2,700	-3,050
영유아 보육 지원	-300	-500	-750
초중등 교육 지원	-600	-600	-600
고등 교육 지원	-1,500	-1,600	-1,700
보건 및 의료	-1,000	-2,050	-2,400
건강보험 범위 확대	-1,700	-1,900	-2,100
고령인구 보건·의료 지원	-600	-600	-650
기타 보건·의료 지출	-300	-300	-300
보건·의료비용 현실화	1,300	450	350
보건·의료지출 효율화	300	300	300
사회보장	-950	-1,150	-1,300
사회보장 확대	-400	-400	-400
보족적(補足的) 소득보장 확대	-550	-700	-800
고령인구 세제혜택	0	-50	-100
기반시설·환경·복지	-3,000	-4,450	-5,500
친환경·혁신 산업 육성	-2,000	-3,000	-4,000
주거 지원	-350	-750	-750
유급 휴직 지원	-550	-550	-550
기타 복지 지출	-100	-150	-200
안보 및 이민	950	750	700
중전(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750	550	500
이민정책 완화	200	200	200
합계	-6,400	-9,600	-11,550

주: 예상되는 지출의 증가는 음수(-), 감소는 양수(+)로 표현되어 있음. 저위, 중위, 고위 각각의 경우를 위한 가정 및 산출방식 등은 아래 출처에 제시된 자료를 참조할 것

출처: CRFB(October 7, 2020)의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8) 단, 기반시설·환경·복지 분야에 배정 예정인 4.45조달러 중 친환경·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출될 3조달러는 장기적 지출이 아닌 일시적 지출에 해당될 것으로 CRFB는 전망했다. 친환경·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관심 있는 독자들은 바이든 선거캠프 홈페이지(<https://joebiden.com/climate-plan> 혹은 <https://joebiden.com/clean-energy>, 최종 검색일자: 2020. 12. 6.)를 참조하기 바란다.

10년간 영유아 보육, 초중등 교육, 고등 교육 각각에 0.5조, 0.6조, 1.6조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중위가정 기준)으로, 총 2.7조달러 규모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출은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액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및 의료 분야 지출 확대도 두드러지는데,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범위 확대나 고령인구 보건·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액은 2.0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과 기반시설·환경·복지 분야에도 큰 폭의 예산 증가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각각 1.15조달러 및 4.4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sup>8)</sup> 반면 안보 및 이민 분야에서

**<표 4>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약으로 인한 예상 세입·세출 변화 비교**

(단위: 십억달러)

항목	바이든	트럼프
보육 및 교육	-2,700	-150
보건 및 의료	-2,050	150
사회보장	-1,150	-
기반시설·환경·복지	-4,450	-2,700
안보 및 이민	750	-300
조세정책	4,300	-1,700
이자비용	-300	-250
합계	-5,600	-4,950

주: 표에 제시된 금액은 향후 10년간(2021~2030년) 예상되는 세입·세출의 변화규모로 세입의 증가나 세출의 감소는 양수(+), 세입의 감소나 세출의 증가는 음수(-)로 표현되어 있음  
출처: CRFB(October 7, 2020)의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필요한 추가예산 규모는 향후 10년간 총 9.6조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온전히 실행될 경우 최근 수십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의 정부지출로 기록될 전망이다.**

는,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의 종전 추진, 이민정책 완화를 통한 추가세수 확보 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0.75조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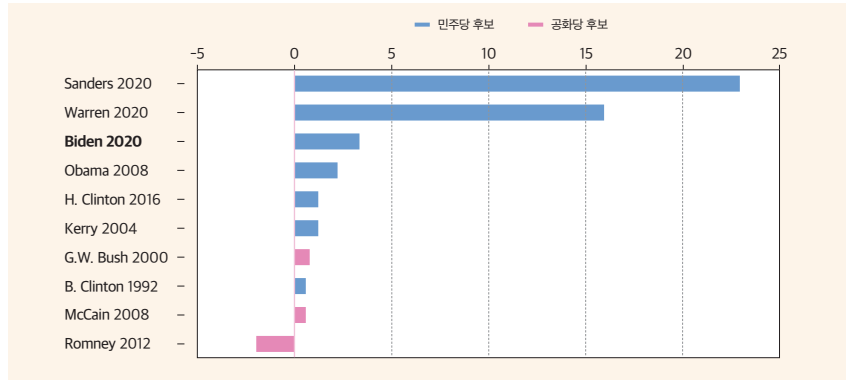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의 규모는 향후 10년간 총 9.6조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시하였던 재정지출 확대 폭인 3조달러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표 4> 참조), 두 후보 진영 간의 온도차를 여실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민주당 경선 당시 바이든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은 다른 경쟁 후보들에 비하면 매우 보수적인 편이었다. 당내 주요 경쟁 후보였던 샌더스(B. Sanders)와 워런(E. Warren)이 제시한 정부지출 계획은 GDP의 15% 수준을 웃돌았기 때문이다([그림 1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정부지출 계획안은 이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오바마(B. Obama), 클린턴(B. Clinton) 등의 계획안과 비교해 그 규모가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까닭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소속 PWBM(Penn Wharton Budget Model, 펜와튼예산모델)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바이든 캠프의 계획은 최근 수십 년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정부지출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보다 적절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고소득자 중심의 대규모 증세 역시 바이든 캠프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바이든 조세정책의 예상 세수(4.3조달러)를 받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은 “최대 수준의 세입 증가가 동반되는 최대 수준의 세출 확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효과성 내지 적절성의 문제는 경제 내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그림 11] 바이든과 타 후보들의 재정정책 비교: 예상 지출규모

(단위: GDP 대비 %)



주: 연환산 평균 추정치임  
출처: The Economist(October 3, 2020)의 “Joe Biden would not remake America’s economy”에서 발췌

영하여 순지출의 규모를 따져보면 5.6조달러(예상 이자비용 0.3조달러 포함)로 추산되는데, 이는 1.7조달러의 감세를 약속한 트럼프의 예상 순지출액 4.95조달러와 비교하여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표 4> 참조). 결국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은 “최대 수준의 세입 증가가 동반되는 최대 수준의 세출 확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효과성 내지 적절성의 문제는 경제 내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하겠다.

#### IV. 바이든 공약의 경제적 영향 전망

대규모 세입·세출 증대 계획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이든의 공약은 과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성장·분배·재정적 측면에서 제시한다.<sup>9)</sup> 이 하에서 상술하겠지만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의 공약 이행으로 분배적 측면에서의 지표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개선에는 재정수지 악화라는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연구결과들은 말하고 있다.

9) 미국 내 관련 연구기관 별로 분석의 방법이 상이한 까닭에 이 하에서 제시되는 성장·분배·재정적 측면의 영향은 동일한 경제적 모형 및 가정에서 얻어진 결과들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특히 성장·분배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전망들은 대부분 바이든이 제시한 재정정책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들로서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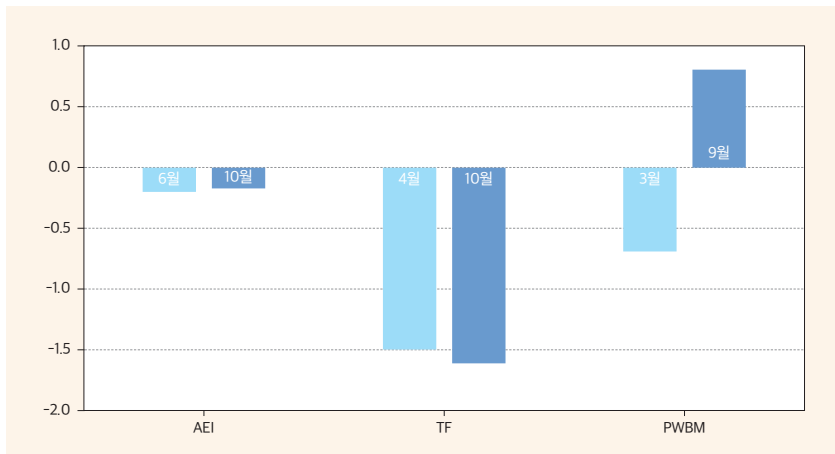
### 1. 성장적 측면

우선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바이든의 조세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과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는 투자나 노동공급의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데, 연구기관들은 그 크기가 기준점 GDP(바이든의 조세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산되는 GDP)의 0.2~1.6%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그림 12] 참조).<sup>10)</sup> 반면, 재정정책의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바이든의 공약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령 PWBM은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이 0.8%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 역시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바이든 집권 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2.6%의 GDP 성장이 예상되어 비교점인 2.4%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림 12] 바이든 공약의 경제적 영향 전망: GDP 성장률

(단위: %)



주: 보고된 수치는 바이든 공약이 이행될 경우 예상되는 기준점 대비 GDP의 장기 변동률임. 각 연구기관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공약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측치를 갱신하였으며, 그림에 제시된 월 정보는 각 연구기관이 (갱신된) 예측치를 발표한 시점에 해당됨. AEI와 TF는 분석 시 재정정책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PWBM의 경우 9월 예측치에만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가 모두 반영되어 있음  
출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Tax Foundation, Penn Wharton Budget Model

10) 특히 최저 예상치인 0.2%는 공화당계 연구기관으로 분류되는 AEI에서 제시한 것이라 더욱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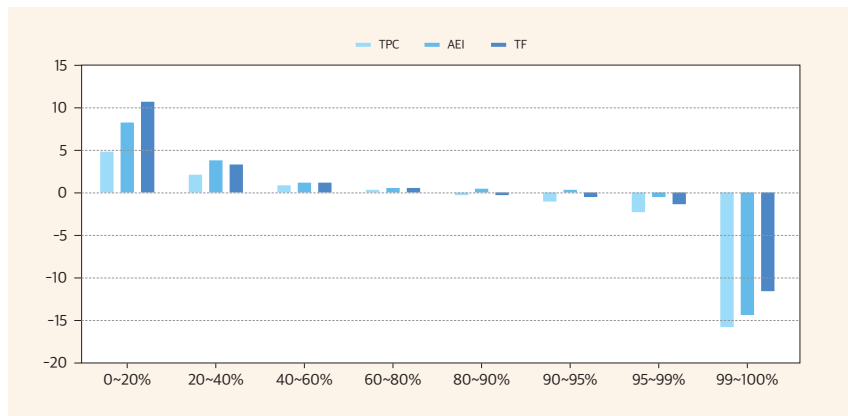
바이든의 계획이 온전히  
실행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조세제도는  
더욱 누진적인 구조로  
변형될 것이며,  
그에 따라 분배적  
측면에서의 지표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분배적 측면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일 바이든의 세계개편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발효될 경우, 미국의 조세제도는 더욱 누진적인 구조로 변형될 것이다. 보다 누진적인 조세체계 내에서 미국의 소득분배지표들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지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상되는 소득분위별 세후소득의 변화 추정을 통해 조세 누진성 강화의 분배적 효과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 방식에 의한 분석결과는 [그림 13]에 제시되어 있는데, 바이든의 계획이 온전히 실행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조세정책은 최상위 소득 집단의 세후소득은 감소시키되 하위 소득 집단의 세후소득은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위 1% 소득 집단의 경우 11.3~15.6% 수준의 세후소득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하위 20% 소득 집단의 경우 5.2~10.8% 수준의 세후소득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sup>11)</sup> 흥미롭게도 이러한 분석결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계획된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세계개편 과정 속에서 현재 극심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일정 수준 개선될 여지를 내비친다 하겠다.

[그림 13] 바이든 공약의 경제적 영향 전망: 소득분위별 세후소득 변화율

(단위: %)



11) 본문에서 언급되는 세후소득의 변화는 조세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영향과, 법인 세율 인상으로 야기되는 귀착 효과 등의 간접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된 것이다.

주: 보고된 수치는 바이든 공약이 이행될 경우 예상되는 소득분위별 기준점 대비 세후소득의 변화율임(단, TPC는 2022년, AEI와 TF는 2021년 세후소득을 분석함). 세 연구기관 모두 재정정책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하위 80%에 대한 AEI의 추정치는 저자가 원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임

출처: Tax Policy Cente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Tax Foundation

### 3. 재정적 측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든 조세·재정 정책의 재정적 영향에 대하여 논의할 차례이다. CBO에 따르면, 2019년 말 GDP 대비 79% 수준이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액은 2020년 말을 기점으로 GDP의 98%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어 2023년에는 그 규모가 역사상 최대 수준인 107%에 이르고,<sup>12)</sup> 10년 후인 2030년에는 109%에 도달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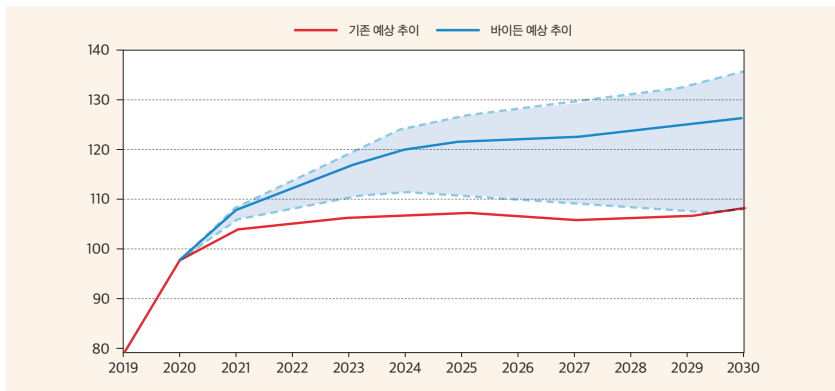
우려스럽게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정부의 부채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RFB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들이 취임 직후 즉시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GDP 대비 부채 수준은 2030년 12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4] 참조). 이는 기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재정적자 13조달러에 바이든의 조세·재정 정책 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5.6조달러가 더해진 결과로, CRFB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정부부채 규모에 있어 역사적 신기록 달성을 향해 달려가는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sup>13)</sup>

따라서 바이든 시대가 개막하더라도 저금리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통화당국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공유함에 따라, 통화당국이 금리인상 유예를 통해 연방정부의

**바이든의  
집권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부채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2024년  
정부부채 규모는  
GDP 대비 12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14] 바이든 행정부의 누적 재정적자 규모 예상 추이(2021~2030년)

(단위: GDP 대비 %)



주: 붉은색 실선은 2020년 9월 CBO가 발표한 연방정부 부채규모의 예상 추이임. 푸른색 실선은 바이든 집권기간 동안 예상되는 부채규모의 추이로, 푸른색 음영 부분은 저위 및 고위 가정에 따른 예상 추이의 가능 범위를 나타냄  
출처: CRFB(October 7, 2020)의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에서 발췌

12) 현재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부부채 규모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에 기록된 106%이다.  
13) 다만 CRFB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도 2030년 정부부채의 규모는 GDP 대비 1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두 후보 모두 재정건전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은 채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을 설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어려워짐에 따라 바이든이 제시한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이 본모습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월한 자금조달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금리와 재정 확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해질 것임을 감안할 때, 통화당국과 연방정부 모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속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 마치며: 실현 가능성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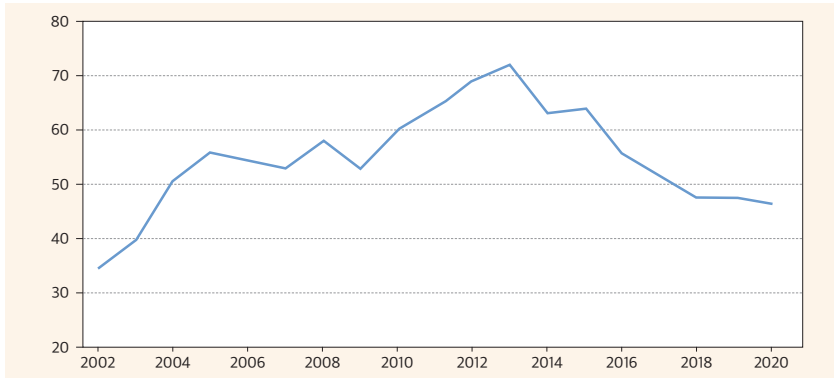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바이든은 법인 및 개인 고소득자 중심의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망 확대 및 친환경·혁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발전적 재건”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하에서는 바이든이 내세운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및 시사점 등을 간략히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우선 바이든이 제시한 조세·재정 정책 관련 공약들이 본모습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12월 6일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확보한 상원 의석 수는 각각 48석(연계 무소속 2석 포함)과 50석인데, 남은 2석의 주인이 결정될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州)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전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예산권과 입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상원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바이든노믹스의 추진력이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분위기다. 물론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공화당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 경기부양법안 통과(2009년) 및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2011년) 등을 주도하며 그 협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미치 매킨(M. McConnell) 공화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상원의 견제 속에서 다시 한 번 중도적 협상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제IV장에서 지적되었듯 연방정부의 부채 수준이 바이든의 집권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만성화된 지 오래며,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인식도 변화([그림 15] 참조),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럽게도 이

[그림 15] 재정적자 감축의 정책적 우선성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변화

(단위: %)



주: 보고된 수치는 재정적자 감축이 대통령과 의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답한 연도별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비율임. 모든 연도의 설문조사는 해당 연도 1월에 실시되었음(단, 2020년의 경우 6월 설문조사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

는 정책 입안자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수기반 확대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될 필요가 있다. 최근 CRFB의 위원장 마야 맥기네스(M. MacGuineas)가 경고하였듯, 지속적인 상환 유예와 무차별적인 차입의 결과 현재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나아가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라 할지라도, 예산 사용처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바이든 캠프는 미국의 제조업 보호 및 부흥을 위한 재정지출을 약속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산업·통상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할 때, 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강구상, 김종혁, 임지운,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3권 제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9. 11., pp. 1~16.  
Chetty R., J. N. Friedman, N. Hendren, M. Stepner, and The Opportunity

연방정부의 부채 수준이 바이든의 집권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14) 최근 일각에서는 바이든 캠프에 가담한 스톨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의 스테파니 켈톤(S. Kelton) 교수와 그린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 Ocasio-Cortez) 하원의원 등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이라 불리는 경제적 견해의 타당성 내지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학문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현대화폐이론은 발권력을 지닌 정부의 파산은 불가능하기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 없이 정부지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주류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P. Krugman)과 그레고리 맨큐(G. Mankiw) 등이 그 이론적 빈약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제롬 파월(J. Powell) 미 연준 의장 역시 “그냥 틀린 말”이라며 지지자들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Insights Team,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Evidence from a New Public Database Built Using Private Sector Data,” *NBER Working Paper No. 27431*, November 2020.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9 to 2029*, January 2019.

\_\_\_\_\_, *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20 to 2030*, September 2020.

Fairlie, R., “The impact of COVID-19 on small business owners: Evidence from the first three months after widespread social-distancing restrictions,”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29, 2020, pp. 727~74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The Great Lockdown*, April 2020.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June 2020.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A Long and Difficult Ascent*, October 2020.

Tempalski, J., “Revenue Effects of Major Tax Bills Updated Tables for all 2012 Bills,” *OTA Working Paper*, February 2013.

● 미 연구기관 보고서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n Analysis of Joe Biden’s Tax Proposals,” June 2020.

\_\_\_\_\_, “An Analysis of Joe Biden’s Tax Proposals, October 2020 Update,” October 2020.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 October 2020.

\_\_\_\_\_, “Understanding Joe Biden’s 2020 Tax Plan,” July 2020.

Moody’s Analytics,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Trump vs. Biden,” September 2020.

Penn Wharton Budget Model, “PWBM Analysis of the Biden Platform,” September 2020.

\_\_\_\_\_, “The Updated Biden Tax Plan: Budgetary, Distributional, and Economic Effects,” March 2020.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Former Vice President Biden’s Tax Proposals,” April 2020.

\_\_\_\_\_, “Details and Analysis of President-elect Joe Biden’s Tax Proposals, October 2020 Update,” October 2020.

Tax Policy Center, “An Analysis of Former Vice President Biden’s Tax Proposals,” March 2020.

\_\_\_\_\_, “An Updated Analysis of Former Vice President Biden’s Tax Proposals,” November 2020.

● **보도자료**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Factchecking Tax Claims in the 2020 Election,” October 21, 2020, <http://www.crfb.org/blogs/factchecking-tax-claims-2020-election>, 검색일자: 2020. 12. 6.

MacGuineas, M., “The national debt still matters, despite low interest rates,” November 2, 2020,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the-national-debt-still-matters-despite-low-interest-rates>, 검색일자: 2020. 12. 6.

Pew Research Center, “As Economic Concerns Recede, Environmental Protection Rises on the Public’s Policy Agenda,” February 13, 2020,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0/02/13/as-economic-concerns-recede-environmental-protection-rises-on-the-publics-policy-agenda>, 검색일자: 2020. 12. 6.

\_\_\_\_\_, “The U.S. budget deficit is rising amid COVID-19, but public concern about it is falling,” August 13, 2020,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8/13/the-u-s-budget-deficit-is-rising-amid-covid-19-but-public-concern-about-it-is-falling>, 검색일자: 2020. 12. 6.

The Economist, “Joe Biden would not remake America’s economy,” October 3, 2020,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0/10/03/joe-biden>

would-not-remake-americas-economy, 검색일자: 2020. 12. 6.

The Wall Street Journal, “Biden Budget to Result in Highest Spending in Decades, Study Finds,” September 14, 2020, <https://www.wsj.com/articles/biden-after-rejecting-progressive-spending-plans-now-hones-multi-trillion-dollar-budget-11600075802>, 검색일자: 2020. 12. 6.

\_\_\_\_\_, “This Election Highlights How Divided the Nation Remains,” November 4, 2020, <https://www.wsj.com/articles/this-election-highlights-how-divided-the-nation-remains-11604465413>, 검색일자: 2020. 12. 6.

● 표·그림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s://www.bea.gov/data/gdp>, 검색일자: 2020. 12. 6.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data>, 검색일자: 2020. 12. 6.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data.html>, 검색일자: 2020. 12. 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 검색일자: 2020. 12. 6.

Decision Desk HQ, <https://results.decisiondeskHQ.com>, 검색일자: 2020. 12. 6.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irs.gov>, 검색일자: 2020. 12. 6.

MIT Election Lab, <https://electionlab.mit.edu/data>, 검색일자: 2020. 12. 6.

OECD Tax Database, <https://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 검색일자: 2020. 12. 6.

Opportunity Insights, <https://tracktherecovery.org>, 검색일자: 2020. 12. 6.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elections/2016/results/president>, 검색일자: 2020. 12. 6.